

“쇠고기 수입자유화되면 축산농가 연간 1조3천억원씩 피해입는다”

— 양돈부문 피해액은 연 7천5백억원

— 홍 보 부 —

쇠고기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축산농가 들은 13조2천억원의 막대한 생산감축, 소득감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쇠고기가 수입자유화 될 경우 그 여파는 비육우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인 양돈과 양계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쇠고기 수입자유화는 곧 축산업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신행박사와 이철현연구원이 작년 말 발표한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쇠고기가 20%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자유화 한다고 가정할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11조7천억원의 축산물 생산의 감축과 7천1천억원의 소득감소를 초래해 모두 13조2천억원(2중 계산부문 공제금액임)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쇠고기 수입은 비육우부문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양돈·양계부문에도 큰 피해를 준다. 즉 쇠고기가 20% 관세를 물고 수입자유화될 경우 양돈산업은 4조4천억원의 양돈생산액 감소와 4조7천억원의 양돈농가 소득감소를 초래, 모두 7조5천억원(2중 계산부문 공제)의 피해를 입힌다. 특히 쇠고기 수입자유화는 139만3천톤의 돼지고기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량이 35.4%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쇠고기가 수입자유화 되면 양계부문에서도 향후 10년간 20만3천톤의 닭고기 수요량 감소를 초래하고, 3천2백98억원의 생산액 감소와 7천5백2억원의 양계농가 소득감소를 초래, 양계부문의 총 피해액은 9천7백95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쇠고기 수입자유화는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쇠고기 수입자유화는 2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52만2천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최고기 수입자유화가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방식대로
수입할당제에 의해
30%를 수입해 올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축산
농가들은 5조7천억원,
40%를 수입할 경우엔
8조3천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된다.

”

〈표〉 양돈부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피해액 추정(1991~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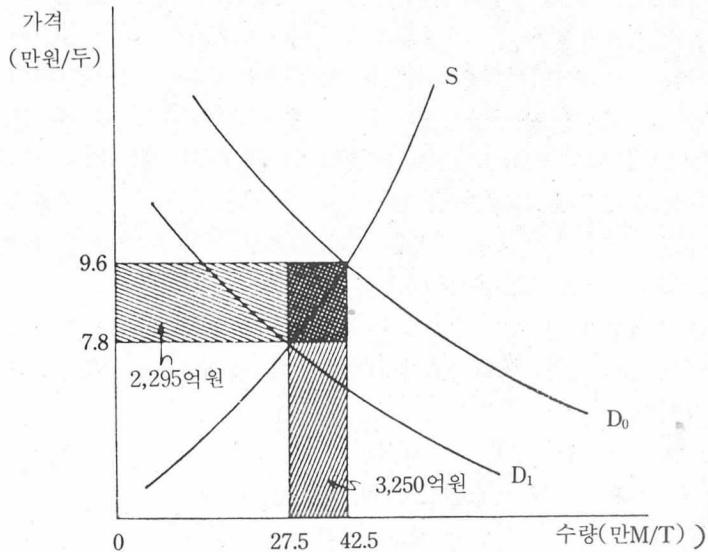
연도	수급량감소 천M/T	가격하락 원/500g	생산액감소억	농가수입감소억	2중계산분 원	수입피해액
1991	56.7	274	1,775	2,655	311	4,119
1992	75.0	347	2,348	3,362	521	5,189
1993	110.4	479	3,456	4,641	1,058	7,039
1994	120.0	486	3,756	4,708	1,166	7,298
1995	110.6	417	3,462	4,040	922	6,580
1996	101.3	356	3,171	3,448	721	5,899
1997	119.3	396	3,734	3,836	945	6,625
1998	175.0	554	5,478	5,367	1,939	8,906
1999	243.3	738	7,615	7,150	3,591	11,174
2000	281.0	806	8,795	7,809	4,530	12,074
계	1,392.6		43,590	47,017	15,704	74,9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러나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방식대로 수입할당제에 의해 30
%를 수입해 올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축산농가들은 5조7천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고, 40%를
수입할 경우엔 8조3천억원의 피
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수입자유
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비육우
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은 한우육의 고급화에 의한 품
질우위 확보여부에 있다고 밝히
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품종개
량과 가격차별이 가능할 수 있
는 유통구조개선에 축산정책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GATT 규
정에 허용되는 모든 수단의 동



〈그림〉 양돈부문의 쇠고기 수입피해(1988년 기준)

원, 즉 관세양허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하여 관세율을 10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고, 외국의 비관
세장벽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도 여기에 상응한
장벽을 설치하여 생산농가를 보
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생산농가
의 소득수준 유지를 위해 생산
보조금보다는 가격안정대유지
를 위한 수매정책이 바람직 하
며, “축산물가격 안정법”을 제
정, 축산물 가격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